

OECD EPC 회의결과

I. 회의 개요

□ 회의 성격

- EPC(Economic Policy Committee)는 OECD 산하 위원회로서 세계경제 전망과 거시경제 및 구조개혁 정책을 검토·평가하는 회의를 매년 5월과 11월 개최

* OECD는 동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을 발간(5월·11월)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1.11.7(월)~8일(화), 프랑스 파리(OECD 본부)
- 참석자: OECD 회원국 대표, OECD사무국, IMF, EC, ECB등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 회의 의제

- Round 1: 경제 회복 강화를 위한 거시경제 정책 수립
- Round 2: 현시점에서의 구조개혁 옵션
- Round 3~6: 세계 경제(美, 유로, 日, 신흥국)의 전망과 정책
- Round7 : 재정건전화와 소득재분배

II. 회의 주요내용

1. 경제회복 강화를 위한 거시경제 정책 수립

가. OECD 안전 요약

[경제동향과 정책대응]

-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와 미국 재정효과 소멸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 민간부문 수요부진과 교역량 감소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정체
- 세계경제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OECD회원국 전체 성장률은 상·하방리스크 요인의 실현 여부 및 강도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전개될 전망

① Event Free 시나리오

- 세계경제를 위협할 리스크요인*이 현재화 되지 않는다면 OECD 대부분 국가는 당분간 미약한 성장세를 보이다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될 전망
 - * 무질서한 국가부도(disorderly sovereign default), 과도한 재정 긴축(excessive fiscal tightening), 금융기관의 연쇄적 파산(systemic bank failure) 등
- ⇒ Event-Free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통화 및 재정 등 거시정책은 다음과 같이 운용될 필요
- 통화정책은 고강도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진 가운데 하방리스크 요인이 한층 우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

- 재정정책은 지출억제와 세입증대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

② 비관적 시나리오(downside scenario)

- 무질서한 그리스 국가부도 발생시 위기상황이 민간 금융기관 및 국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의 심각한 불황을 초래
 - 시나리오 분석결과 과다채무국(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의 장기국채금리 350bp 상승, 주식가격 40% 하락 및 세계교역량 9.2% 축소
- ⇒ 전염효과 차단을 위해서는 은행들의 충분한 자본확충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EFSF 한도증액 및 ECB 유동성 지원 등의 정책대응을 통한 신뢰성 회복이 병행될 필요

③ 낙관적 시나리오(upside scenario)

- 유럽지역의 국가채무문제에 대한 신뢰성 있는 해결방안이 제시되는 경우 재정 취약국들의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가계 및 기업의 지출이 늘어나는 등 낙관적인 경기전망도 가능
 - 시나리오 분석결과 장기금리기준 과다채무국의 독일과의 스프레드가 50bp 수준으로 축소되고 OECD 전체성장이 Event-Free 시나리오대비 2012년 0.75%, 2013년 1.25~1.5% 가량 증가하면서 세계교역량이 2년간 5% 증가
- ⇒ 국가채무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등 과다채무국에 대한 EU차원의 범국가적 자금 지원 대책과 IMF/EU 프로그램 등과 같은 개별국가를 대상으로 한 지원방식이 함께 고려될 필요
-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EFSF기금 확대, IMF 대출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ECB의 역할이 중요

[경제여건 재악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전략]

- 세계경제가 하강국면으로 재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각국은 정책여건에 따라 선택 가능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
 - 과도한 재정적자로 추가완화정책여력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 재정건전성 개선과 이를 통한 신뢰성 회복이 긴요
 - 중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통하여 단기적 효과와 중기적 목표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
 - 통화정책 면에서는 미국, 일본 등 제로금리 유지국가의 경우 대규모 자산매입 등 비전통적 방식의 금융완화조치를 강화하고 정책금리에 있어 조정여력을 확보한 국가의 경우는 금리인하도 고려 가능
 - 아울러 시장경쟁력 제고, 조세 및 연금제도 개혁, 공공부문 효율성 증진, 대외개방도 확대 등 구조개혁을 통해 경기하강시 위험흡수 능력을 보장

나. 주요 논의 내용

- 글로벌 금융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물부문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우세
 - 이에 따라 정책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구심이 경제주체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장기 경제전망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배경의 제시가 필요

-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추가 금융완화를 위해서는 정책금리 조정 과 함께 대규모 자산매입 등의 비전통적 수단도 활용 가능
 - 다만 과도한 완화기조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른 과잉유동성 및 기대인플레이션의 움직임에 유의할 필요
- 경기 부진으로 재정기조의 급격한 긴축전환이 여의치 않은 데다 복지 등 경직성 지출의 증가와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재정악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와 단기적 재정지출의 경기부양 조치가 상충되지 않도록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누수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간별 재정계획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문별 재정지출의 효과도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적자금 등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시장안정대책이 금융기관의 연쇄적인 파산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위기 극복에 유효했던 것으로 평가되나 과도한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국가채무상태가 악화되는 부작용을 초래
 - 특히 유럽 재정취약국의 국가채무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시장 내 국채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될 위험이 크게 증대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시장의 체질 강화를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도 강조될 필요

2. 현 시점에서의 구조개혁 옵션

가. OECD 안전 요약

[구조개혁 옵션]

- 상품·노동 시장 개혁,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세제·연금 개혁 등 구조개혁 정책들은 경기침체 발생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음
 - 구조개혁 정책들이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총 수요 증대를 유발할 수 있음
 - 잠재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단기적 재정 정책의 범위가 넓어짐
- (상품시장 개혁) 일반적인 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산업, 전문직 서비스업, 소매업에서 경쟁을 제고
 - 일부 국가에서는 민영화(이탈리아·폴란드 등), 서비스 분야에서 EU내 통합 강화 등이 내수와 신뢰를 창출할 수 있음
 - Non-OECD국에 대해서는 중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상품시장 개혁이 요구됨
- (공공부문 개혁) 영국 등의 국가에서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향후 재정 정책의 여지가 커질 것으로 보임
- (개방 증대) 해외투자를 유치해 투자를 유인하고, 교역에서의 개방성을 높여 실질 소득과 수출을 증대
 - 한·일 간, 러시아·인도 간 국제적 개방성 증대 필요
- (노동시장 개혁)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고용을 증대시키고, 위기시에 필요한 재정 정책 대응 여력을 제공

- 이탈리아·영국 등 OECD 국가 절반 이상에서 이러한 개혁이 필요
- (연금 개혁) 고령화에 따른 공공부문 지출을 절감하고, 건강 관련 공공재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 조기 은퇴, 장애/질병 등에 대한 개혁이 필요
- (세제 개혁) 직접세(근로소득세, 법인세)를 줄이고 간접세를 높이는 소득 중립적인 세제 개혁
 - 이를 통해 몇몇 OECD 국가(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장기적으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금융시장 개혁) 미국의 경우 마련된 개혁 조치를 빠르게 실행하고 모기지론의 차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중요
 - 스위스의 경우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대형 은행의 자본을 확충할 필요

[WP1 관련: 위기 기간의 구조개혁 정책]

- 위기 초반('08~'09)에는 거시경제 안정에 초점을 두면서, 구조개혁 진행이 더디었으나, 회복세가 시작된 이후('10~'11)에는 위기이전('05~'07)보다 구조개혁이 빠르게 진행
 - 재정 건전화 압력으로 인해 은퇴 및 복지시스템·공공부문 등에서 구조개혁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위기가간 동안 "노동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
 -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기 초기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확대, 실업급여 혜택기간 증대 등 실업 급여 시스템(unemployment benefit system)을 일시적으로 강화
 - 다만, OECD는 동 제도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노동시장이 회복된 이후에는 실업 혜택 수준과 기간을 축소할 것을 권고

- 잡세어링 등 단기 노동 프로그램(Short-time working schemes)은 급격한 노동시장 침체를 방지하고, 인적자원 퇴출 방지로 중장기적 노동활용도를 제고
 - 다만, 장기적으로 퇴출되어야 하는 일자리 보전, 임금압력 상승 등의 비효율성(deadweight loss)도 일부 발생
- 한부모 소득지원, 보육시설 확대, 육아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제고(한국, 독일, 스위스 등)
- 정규직 퇴직금 축소(네덜란드, 그리스, 스페인)와 비정규직 직업훈련 강화(한국) 등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성 완화
-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제도 신설(그리스 등) 등 최저임금 시스템 개혁을 통해 저기술 노동자 활용도 제고
- 위기가간 동안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
 - 경제전반의 규제 철폐를 통한 상품시장 개혁
 - 등록·허가절차의 단순화(벨기에, 한국), 파산절차 단순화(체코), 공공부문 계약의 경쟁력 강화(덴마크) 등 추진
 - 소매업 가격규제(프랑스), 판매 규제(벨기에), 개점시간 규제 철폐(포르투갈, 덴마크) 등을 통한 유통소매업 경쟁력 제고
 - 위성방송 산업 등 FDI 규제 완화(한국, 캐나다) 등도 추진
 -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을 소득보전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농산물 분야 구조개혁 추진(유럽, 스위스)
 - 교육시스템의 질·효율성 제고와 교육 불평등 완화를 통해 인적자본을 강화(칠레, 뉴질랜드)
 - 재정건전성 강화와 성장친화적인 조세 개혁 추진
 - 면세 축소(일본), 소비세원 확대(한국) 등을 통한 세원 확대와 근로소득세(독일, 핀란드)·법인세(캐나다, 이스라엘) 감세 등 추진

- 향후, 재정건전화와 고용 회복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개혁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
 - 노동활용도를 제고시키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업 급여(unemployment benefit) 개혁을 추진
 - 비정규직·정규직 간의 격차를 완화시키는 등 노동시장의 이중성 개선
 - 세원을 확대하고, 세금부담을 고용·성장관련에서 재산·소비·환경 등으로 이전하는 방향의 조세개혁을 추진
 - 유통업·전문서비스 분야 등 단기간에 노동을 창출시킬 수 있는 상품시장 개혁
- (주요 논의 내용) 위기가 구조개혁을 촉진시킨 점과 정치경제적 개혁을 강조할 필요성에 상당한 동의가 있었음
 - 다만, 일부는 구조개혁 정책이 위기시 단기적인 경기침체를 유발할 부정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각국은 구조개혁 정책이 장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정책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time-line을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
 - 또한 일부는 구조개혁 정책이 재정건전화 노력과 동시에 추구되어야 함을 강조
 - 각국이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고용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금번 재정위기가 각국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에 좋은 기회라는 평가도 제시

[WP1 관련: 구조개혁이 단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구조개혁 정책에 따라 미치는 영향은 다르나,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총수요와 고용 증대를 유발할 가능성

- 구조개혁 정책이 신뢰효과, 소득효과, 자산효과의 경로로 총수요에 단기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 ① (노동시장 이중성 완화) 단기적으로는 해고가 용이하여 고용과 총수요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나, 중장기적으로는 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져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
 - ② (실업급여 축소) 해고비용은 동일한 상황에서 구직률을 제고하여, 단기적으로 실업률 감소 및 총수요 증대 효과
 - ③ (노동정책 활성화) 구직활동 지원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낮아지고, 소비와 총수요가 증대됨
 - ④ (진입장벽 축소) 새로운 기업 설립되면서 GDP는 증대되나, 단기적으로 투자(저축) 증대로 소비는 감소하며, 일자리 창출보다 해고가 빨리 이뤄지며 실업이 소폭 상승
- ⇒ 진입장벽 개선과 노동정책 활성화 등 다양한 구조개혁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합(package)·활용하면, 단기적으로 GDP 증대와 구조개혁에 따른 이행비용 축소 가능
- 다만, 각국의 제도적 상황과 거시경제 정책에 따라 구조개혁이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가능성
 - 가격·임금 등 명목변수가 경직적인 경우, 효과가 느리게 발생하는 반면,
 - 진입장벽이 낮거나, 개방도가 높은 경우에는 효과가 커짐
- 각국의 구조개혁 경험의 경제적 효과도 분석과 대부분 일치하나, 전반적으로 성장과 고용이 잠재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구조개혁의 부정적 영향이 커짐
 - 실업급여 축소는 고용회복효과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단기기간에 발생하나, 고령층에게는 부정적 효과 발생
 - 노동정책 활성화(ALMP)는 단기적으로 고용증대효과가 존

재하나,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 가능성

- 근로소득세 인하는 실업률을 단기간에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특히 중기적으로 여성과 젊은층 고용을 증대
- 상품시장 개혁은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증대시키나, 기업지출 감소로 투자와 GDP는 감소

□ (주요 논의 내용) 많은 회원국들이 구조개혁이 단기적으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 동의

- 다만, 분석에 있어 내생성 문제를 포함하여, 유동성제약과 환율 등 대외거래 부문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점 있음
- 일부에서는 보고서에 제시되지 않은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기타 개혁 조치들을 제시
 - 일부는 직접세에서 성장과 실질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조세 부담을 지우는 조치(노르웨이), R&D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프랑스), 의사소통에 있어 정부 역할의 중요성(헝가리) 등
- 구조개혁이 이뤄지는 사회경제적 여건, 구조개혁의 추진 속도 등에 따라 경제적인 효과와 비용이 다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 저소득-고소득 근로자, 고령층-청년층 등 국가 내에서도 계층간 미치는 효과가 다르고,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노력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나. 주요 논의 내용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최근의 재정건전성 추세로 거시경제 재량(room)이 축소된 상황에서 사무국의 구조개혁이 경제에 미치는 장단기 효과 분석에 대해 의미있다고 평가하면서도,
 - 아국대표를 포함한 다수 국가대표들은 사무국의 분석모델(DSGE) 한계에 대해 지적
 - 스웨덴·스페인 대표 등은 모델의 제약조건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내생성 문제를 포함하여, 유동성제약과 환율 등 대외거래 부문이 모델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을 언급
 - 이태리 대표는 동태적(Dynamic) 분석을 하는 DSGE 모델이 장기적인 영향 분석에는 효과적이나, 단기적인 분석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

- 또한, 대부분 구조개혁이 이뤄지는 사회경제적 여건 및 구조개혁의 추진 속도에 따라 경제적인 효과와 비용이 다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
 - 호주·노르웨이 대표는 저소득-고소득 근로자, 고령층-청년층 등 국가 내에서도 계층간 미치는 효과가 다르고,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노력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

3. 미국 경제 전망과 정책 이슈

- (동향 및 전망) 경제회복이 모멘텀을 잃고 있는 가운데, 재정건전화, 주식시장에서의 손실과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가계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수요 위축이 지속될 것
 - 다만, 점진적인 심리 개선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12년 중반 이후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성장) 가계 소득이 압력을 받고 있어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 취약한 경제활동 동향, 부진한 소비 등으로 '11년 상반기 실질 GDP가 급격히 둔화
 - 근로소득세 인하 등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와 상품 가격의 급격한 증가로 가계 실질소득 증가가 미미
 - 최근 은행의 신규 대출 확대 등 신용 여건이 개선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민간부문 디레버리징이 상당부분 진행됨
 - 가계 금융부채는 고점 이하 수준이고, 기업의 현금 보유가 증가
 - 그러나 증시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고, 소비 심리 지표도 악화되어 소비 증가가 상당기간 미약할 것으로 보임
 - (고용) 민간부문 고용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구직난 해소에는 불충분하며, 당분간 고용창출은 느린 속도로 이루어질 전망
 - 노동 수요 증가 등으로 실업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에는 수년이

결릴 전망

- 높은 장기실업자 비중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구조적 실업 증가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투자) 주택투자는 상당기간 동안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그림자” 재고를 포함한 높은 주택 재고 수준, 높은 압류율 등으로 주택투자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임
 -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최저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낮아졌으나, 많은 가계에서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불확실성하에서의 투자를 꺼리고 있음
 - 최근 설비투자는 그간 지연된 낡은 설비의 교체 수요 등을 반영해 정상적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 낮은 설비투자 가동 수준, 기업 심리 지표 악화 등으로 설비투자 증가 속도는 점점 낮아질 전망
- (정책) 재정건전화는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연준은 저금리* 유지 외에 장기자산 보유비중 조정 등 추가적 완화 조치를 취할 필요
 - * '13년 중반까지 0~0.25%의 저금리를 유지하기로 함('11.8월)
 -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해야 함
 - 상품 가격 하락, 상당한 수요 부족 등으로 물가상승률과 근원 물가상승률은 둔화될 것으로 보임
 - (재정정책) 향후 2년간 재정건전화의 속도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기초재정수지를 GDP대비 2%p 감축할 것으로 추정

- 단기적으로 재정긴축의 속도를 완화할 경우 **명확한 중기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설정할 필요
- 적자 감축은 취약한 경제 회복세를 억제하지 않으면서 중기 재정 목표에 대한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함
 - 재량지출의 한도와 재정감축(향후 10년간 2.4조 달러 규모)에 대한 합의는 긍정적이나, 정치권의 신뢰성있는 합의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더 많은 조치들이 필요
- 한편, 낮은 주택담보대출금리 등에도 불구하고 차환이 어려운 가계의 지불 부담을 낮추는 **리파이낸싱 조치**는 저금리 하에서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보완적 수단
- **(구조개혁) Dodd-Frank법에 따른 금융부문 개혁**이 지연되지 않고 실행될 필요
- 또한 **거시건전성 프레임워크 도입**은 금융안정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줄 것

4. 유로 경제 전망과 정책 이슈

가. OECD 안전 요약

- 경기회복이 재정긴축 지속 및 민간부문 구조조정으로 지연되는 가운데 물가는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
 - (성장) 민간소비가 가계의 예비적 저축 증대로, 투자는 신용경색으로, 수출은 세계경기 위축으로 각각 둔화되는 가운데 2011.4/4분기 ~ 2012.1/4분기에는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전기대비)이 예상되지만 2012년 중순부터는 가계·기업·금융부문에서의 신뢰 개선으로 회복세가 재개될 전망
 - (고용) 실업률은 국가채무위기의 영향으로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여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개혁 필요성이 부각될 전망
 - (물가) 에너지가격 하락, 성장세 둔화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재정) 유로지역 국가들은 재정신뢰성 회복을 위해 당분간 긴축재정을 이행할 전망

성 장

	2010	2011	2012	2013	Fourth quarter		
					2011	2012	2013
	Current prices € billion		Percentage changes from previous year, volume (2009 prices)				
GDP at market prices	9 134.2	1.6	0.3	1.5	0.9	0.8	1.7
Private consumption	5 254.0	0.4	0.2	1.0	-0.1	0.6	1.1
Government consumption	2 008.6	0.2	-0.3	-0.1	0.0	-0.2	-0.2
Gross fixed investment	1 738.3	2.1	0.1	2.5	1.5	1.0	3.0
Public	236.6	-6.3	-5.6	-2.2	-8.0	-3.7	-1.8
Residential	452.6	1.2	0.1	1.6	1.7	0.6	1.9
Non-residential	988.4	4.6	1.3	3.7	3.7	2.1	4.3
Final domestic demand	8 996.8	0.7	0.1	1.0	0.2	0.5	1.2
Stockbuilding ¹	20.4	0.3	-0.2	0.0			
Total domestic demand	9 017.3	1.0	-0.1	1.0	0.3	0.5	1.2
Net exports ¹	117.0	0.7	0.4	0.5			

고용, 소득 및 물가

	2009	2010	2011	2012	2013
Employment	-1.8	-0.5	0.2	-0.2	0.2
Unemployment rate ¹	9.4	9.9	9.8	10.1	10.1
Compensation per employee ²	0.7	1.8	2.7	1.9	1.9
Labour productivity	-2.4	2.2	1.1	0.4	1.3
Unit labour cost	4.0	-0.7	1.0	1.5	0.4
Household disposable income	-0.3	1.4	2.3	1.8	2.0
GDP deflator	1.0	0.8	1.4	1.5	1.2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0.3	1.6	2.6	1.5	1.2
Core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³	1.4	1.0	1.4	1.5	1.2
Private consumption deflator	-0.2	1.8	2.4	1.5	1.2

주 : 1) 성장 기여도

-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재정취약국의 경우 재정지출 감소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물가상승률은 둔화될 전망
 - (성장) 소비위축, 투자감소, 수출둔화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성장(2012년 그리스, 포르투갈) 또는 성장세 둔화(아일랜드)가 예상
 - (고용)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
 - (물가) 국내 수요측면의 상승압력이 낮아져 물가상승률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재정)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성장위축으로 인한 세수감소, 이자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

재정취약국의 주요 지표 전망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GDP	-5.3	-2.9	0.8	1.2	1.0	2.4	-2.0	-2.6	0.7
민간소비	-5.3	-4.8	-0.9	-2.5	-0.5	0.7	-3.8	-3.2	-0.3
정부소비	-8.0	-5.0	-3.3	-3.1	-1.6	-4.2	-3.7	-6.0	-4.0
고정자본형성	-16.7	-7.0	0.9	-6.3	-3.3	1.2	-11.4	-10.2	-0.4
순수출 ¹⁾	6.0	3.2	1.8	3.6	2.4	2.6	3.8	2.4	1.7
(수출)	7.7	6.6	7.2	4.2	3.3	5.8	6.6	3.4	6.1
(수입)	-14.2	-5.7	0.4	0.8	1.2	4.3	-4.3	-3.2	1.3
물가	2.9	1.1	0.2	2.7	1.1	0.9	3.4	2.2	1.1
실업률	16.6	18.5	18.7	14.1	14.1	13.7	12.5	13.7	14.1
재정수지	-8.7	-6.8	-4.8	-10.0	-8.6	-6.5	-5.9	-4.5	-3.0
경상수지	-8.8	-6.3	-5.4	0.5	1.6	1.9	-8.7	-5.7	-3.8

주 : 1) 성장 기여도

[유로국가의 채무위기 시나리오]

- 유로국가의 채무위기 시나리오는 그리스의 무질서한 디폴트* (disorderly default)에 대해 유로지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두고 downside risks와 upside risks로 구분하여 전망

* 질서 있는 디폴트는 소규모 채무조정이 있고 CDS 촉발조항 (CDS trigger clauses)이 없는 경우를, 무질서한 디폴트는 대규모 채무조정이 있고 CDS 촉발조항이 있는 경우를 의미

① **downside risks**(위기대책이 없는 경우)

- 그리스 국채 보유 및 그리스 금융부문 대출이 많은 외국은행들의 손실이 확대되며 주변국의 국채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투자자의 리스크 회피 성향이 확대
- 그리스의 채무조정이 아일랜드 및 포르투갈의 디폴트 우려를 증가시키지만 이들 국가의 필요자금은 IMF/EU 프로그램에 의해 커버되고 있어 국채시장 금리상승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등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침
- 극단적인 시나리오로서 발생확률은 낮지만 2008~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주가 폭락, 디레버리징, 높은 이자율과 리스크 프리미엄을 동반

② **upside risks**(위기대책이 있는 경우)

- 유로지역 전체로의 위기전염 방지를 위해 회원국들이 충분한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재정취약국들이 재정건전화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 국채금리의 대폭 하락 및 시장의 불확실성 축소로 가계 및 기업의 지출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가능

유로지역 및 세계경제의 downside 및 upside 시나리오

(%)

Macroeconomic model simulation result		Downside Scenario		Upside Scenario	
		2012	2013	2012	2013
Euro Area	GDP growth	-2.07	-3.68	0.96	1.77
	Inflation	-0.34	-2.16	0.10	0.97
	Unemployment rate	0.72	2.14	-0.37	-1.09
	Budget Balance ¹⁾	-1.00	-2.56	0.43	1.05
	Current balance ¹⁾	1.20	2.37	0.49	-1.16
World	GDP growth	-1.29	-2.10	0.54	0.91
	Trade growth	-4.17	-5.32	1.94	2.57

Note : 1) % of GDP

Source : OECD calculations, using NiGEM

나. 주요 논의 내용

- 10.26일 유로정상 합의내용*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시장불안요인이 내포

* “<참고> EU 정상회의의 주요내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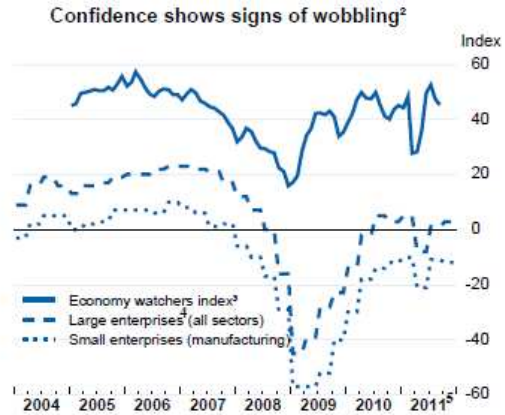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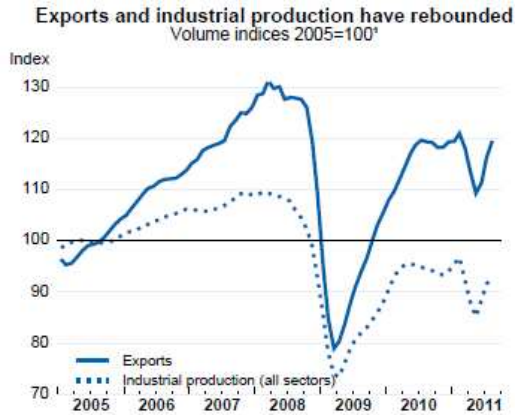
- 그리스의 실질 GDP 성장률 및 재정수지를 고려하면 그리스 채무조정 효과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리스 채무조정 성공에 중요한 민간참여율 및 그리스 국가자산매각계획의 실현여부도 불확실
 - 채무상환능력 확보를 위해 민간손실분담률을 상향조정(50% → 70%)하여 그리스 정부부채 비율을 2020년에 120%가 아닌 90%로 대폭 낮출 필요
- 자본확충을 위한 은행의 자구노력 과정에서 디레버리징이 나타나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
-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각국 정부가 은행채를 보증하기로 하였지만 국가채무위기를 겪고 있는 주변국은 재정여력이 없는 실정
- 그리스 국가채무 경감을 위해 민간손실분담률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지만 이로 인해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재정취약국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

- 2012년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되고 소폭의 경기침체 가능성도 대두되는 가운데 다수 국가가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화정책적 지원이 필요

5. 재정건전화

가. OECD 안전 요약

- 일본 대지진의 피해로부터 최근 회복세가 둔화되는 움직임 보이는 가운데 구조개혁과 관련된 거시경제정책 이슈 제시
 - 일본정부는 위축된 경기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경기약화시 경기자동안정화 기제도 부분적으로 완화할 필요
 - 복구비용 지출은 일본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비율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일본 중앙은행은 물가 하락세를 저지하기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양적완화정책을 확대해야함.
 - 신(新)성장전략(New Growth Strategy)의 일환으로서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추구할 필요
 - 수입, 노동과 자본 등의 유입의 장애물을 제거해야함.
 - 재정건전화의 일환으로서 세제개편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
 - 법인세 비중을 낮추고 직접세 비중을 늘려야함.
-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부터 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회복속도가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임.
 - 최근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와 5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엔화 절상 등에 기인하여, 일본의 신뢰지수들이 악화되는 모습을 나타냄.



1. Data are three-month moving averages of seasonally-adjusted industrial production and non-seasonally-adjusted exports.
2. Diffusion index of "favourable" minus "unfavourable" conditions.
3. The "Economy Watchers" index, which includes workers such as taxi drivers and shop clerks, whose jobs are sensitive to economic conditions.
4. Large enterprises are capitalised at a billion yen or more and small enterprises at between 20 million yen and a hundred million yen.
5. Except for "Economy Watchers" index where there are no projections, numbers from October to December are companies' projections made in September 2011.

Sourc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Bank of Japan; Cabinet Office.

- 일본정부는 지진피해복구를 위해 총 19조엔 상당의 지출을 계획
 - 이미 통과된 6조엔 규모의 복구예산프로그램에서 추가적으로 9조엔 규모의 세 번째 복구예산프로그램이 승인됨.
 - 그러나 추가적 지출은 일본 정부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 2012-13년 재정적자는 GDP의 9% 이상, 공공부채는 GDP의 230%까지 상승 전망
- 세 번째 복구프로그램은 일본 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세금인상을 통한 추가적인 재정수입으로 충당될 대지진부흥채권 발행으로 자금 조달 계획
 - 이런 시도는 2015회계연도까지 재정적자 수준을 반으로 줄이고 2020년까지 공공 채무비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함.
 - 그러나 재정건전성에 관한 일본정부의 목적이 달성된 경

우에도, 재정적자는 GDP대비 9% 이상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

- 중앙은행은 0%수준의 정책금리를 유지하고, 지진 피해복구와 2011년 중반부터 지속된 엔화 절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양적 대응 확대
 - 정책금리수준에서 금융기관들에게 추가로 5조엔에서 35조엔(GDP의 7%)까지 대출을 확대
 - 자산매입프로그램 또한 기존의 계획인 5조엔에서 8월중 15조엔(GDP의 3%)까지 확대됨.
 - 8월중 엔화절상을 억제하고자 외환 시장에 개입(4.5조엔 (GDP의 0.9%) 투입)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2/4분기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1% 하락
- 경기 회복세는 201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의한 복구를 위한 지출에 의해 산출량이 2012년까지 약 2%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공공 투자의 기여도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기업과 주택 투자가 경제 회복세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2012-13년에 일본 수출 증가세가 예상
- 그러나 일본 국내외로 많은 불안요소들이 여전히 존재
 - 후쿠시마 원전사태이후, 많은 원자력발전소들의 재가동이 지연됨에 따라 생산증가율이 제한됨.
 - 일본은 전력생산의 1/3을 원자력 발전에 의존
 - 재정건전화의 지연과 공공부채 비율의 상승은 장기이자율 상승으로 연결될 위험 내포
 - 세계경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환율 또한 일본경기 전망에 부정적으로 작용

나. 주요 논의 내용

- 주요 전망기관들은 일본 경제가 대지진 영향으로부터의 회복세를 유지함에 따라 2012년 경제성장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일본의 복구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일본의 고용여건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한편, 부진한 실질가계소득에 기인하여 민간소비가 회복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일본경제 내 불안요인이 존재하는 상황
 - 소비심리지수를 비롯한 주요 심리지수들의 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임.
- 따라서 현재 일본의 경제 회복세를 보다 견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주요 투자은행별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

(%)

	2011	2012			2011	2012
	4/4	1/4	2/4	3/4		
Barclays Capital	1.6	2.3	3.1		-0.5	2.4
Credit Suisse	-1.3	0.6	2.2	1.8	-1.1	0.9
Citi	1.0	2.7	0.6	1.5	-0.4	2.1
JP Morgan	2.0	1.8	1.5	1.3	-0.6	1.9
성장률 평균	0.8	1.9	1.9	1.5	-0.7	1.8

주: 1) 2011년 10월 31일 전망 기준.

2)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임.

자료: 국제금융센터.

-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지출의 증가로 인한 일본의 재정 적자 악화 등에 기인하여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일본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함.

○ 일본의 재정적자 수준은 2012-13년에 GDP대비 9% 이상, 공공부채비율은 GDP대비 230%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지진피해로부터의 회복세가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등 일본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요구됨.

□ 따라서 일본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을 마련해야 함.

○ 세계 개편을 통한 재정수입의 증대를 추구함으로써, 피해복구 지출로 인하여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음.

○ 또한, 재정건전성 문제는 향후 일본 경제회복에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을 촉진시킬 필요성을 제기함.

6. 신흥국 경제의 전망과 정책 이슈

가. OECD 안전 요약

[경 기]

- 최근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 경제는 민간소비·투자 등 내수확대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선진국 경제의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로 성장세가 둔화
 - 중국은 수출수요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2010년 10.4% → 2011년 9.0%)
 - 인도는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내수 악화로 성장률이 다소 하락
 - 브라질은 2010년의 높은 성장세가 꺾이기는 하였으나 민간소비 확대, 대규모 인프라건설에 따른 투자 증가 등으로 금년 3~4%대의 성장세를 지속
 - 러시아는 높은 원유(천연가스 포함)가격 지속, 곡물생산 증가 등으로 성장모멘텀이 유지되면서 4%대의 성장세를 유지
- 향후 신흥시장국 경제는 유로지역 국가부채위기 지속으로 인한 수출부진 등으로 2012년까지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2013년부터 회복세를 보일 전망
 - 특히 중국경제는 2012년 8%대로 성장률이 하락하여 잠재성장률 수준에 미달할 전망

[물 가]

- 신흥시장국의 물가는 금년 들어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 자국통화의 절상 압력 등으로 오름세가 점차 둔화

- 중국은 2010년 이후의 통화긴축기조 지속, 식료품가격 안정 등으로 금년 하반기 이후 물가오름세가 둔화
 - 인도네시아와 러시아 등도 자국통화 절상, 식료품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
- 향후 신흥시장국의 물가는 원자재가격 하락과 글로벌 경제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하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재정상황]

- 신흥시장국은 확장적 재정정책 등의 영향으로 재정적자를 시현
- 특히 중국은 중앙정부 부채 이외에 지방정부 및 자산관리공사 부채 등 공식 재정통계로 분류되지 않는 부채 (GDP의 1/3 추정)가 막대한 규모

주요 신흥시장국의 거시경제지표

	<u>소비자물가</u>					<u>재정수지¹⁾</u>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09	2010	2011	2012	2013	
브라질	4.3	5.9	6.6	6.2	5.1	브라질	-3.3	-2.5	-2.7	-2.9	-2.8
러시아	11.7	6.9	8.3	6.2	5.7	러시아	-4.3	-3.5	0.0	-0.7	-0.7
중국	-0.7	3.2	5.7	4.2	4.0	중국	-1.1	-0.6	-0.9	-1.6	-1.3
인도	12.4	10.4	8.4	8.1	6.9	인도	-9.8	-7.2	-7.1	-6.3	-6.0
인도네시아	4.4	5.1	5.7	5.9	4.5	인도네시아	-1.6	-0.6	-1.5	-1.3	-1.2
남아공	7.1	4.3	5.0	5.2	4.7	남아공	-5.5	-6.0	-4.3	-4.1	-3.2

주 : 1) GDP 대비

나. 주요 논의 내용

- 유럽 재정위기 및 미국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가능성이 제기
 - ⇒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은 수출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견실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소득세 감면 등을 통한 내수확대의 여력이 있는 데다 신흥시장국간 교역확대도 늘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OECD의 전망자료에서는 중국의 2012년 성장률 전망치(8.5%)를 잠재성장률 이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그러한 성장률은 중국의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일반적으로 중국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8~9%로 보며, 제12차 5개년계획기간(2011~15)중 성장률 목표수준도 7%

- 최근 선진국 경제부진 등에 따른 국외여건 면에서의 성장세 둔화우려와 달리 국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억제 및 자본유출
 - 중국, 인도 등 일부 신흥시장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의 완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금리 인상 등을 통해 긴축기조를 지속한 반면 브라질 등은 물가상승압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정책금리를 인하

-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중국이 현재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에서 언제 완화적인 정책기조로 돌아설 것이냐도 세

계 경기회복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이슈임

⇒ 현재 중국정부의 통화정책 입장은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 등에 비추어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나, 성장이 빠르게 위축되는 조짐이 보일 경우 통화정책 긴축기조의 완화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판단

7-1. 재정 건전화

가. OECD 안전 요약

-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됨에 따라, 정부부채를 조속히 안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적절 수준으로 감축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 재정위기를 심하게 겪고 있는 PIIGS 국가들은 GDP 대비 5~12% 수준의 재정건전화 작업을 이미 착수한 상태
 - GDP대비 정부부채 비중에 대한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미래의 각종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기반을 마련할 필요
- 시뮬레이션 분석결과(baseline)에 따르면, 정부부채의 GDP 대비 비중을 2050년까지 50%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국가들이 상당수준의 재정긴축을 지속해야 함.
 - 일본, 미국, 영국 및 뉴질랜드의 경우 매년 GDP 대비 5% 이상의 기초재정수지 개선을 지속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상황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이 상기 장기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baseline 분석이 의료 및 장기요양 지출의 GDP대비 비중이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수행되었기 때문
 - 강력한 재정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 국가에서 장기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 2050년까지 지속적인 기초재정수지 개선이 여의치 않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상기 분석결과는 필요 재정수지 개선폭의 하한(a lower bound)으로 해석될 필요

- 재정수지 개선 지체, 차입비용 증가, 재정위기 도래 등이 발생할 경우 필요 재정수지 개선 폭은 상승

□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대규모의 재정긴축을 단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없는 경우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 신뢰성 있는 재정건전화 전략과 제도를 갖춘 국가일수록 재정건전화의 여지가 높기는 하지만 금융시장이 불안한 국가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

- 재정승수가 작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건전화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 성장률 하락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높은 성장률과 낮은 금리가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초재정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필요한 상황

□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출측면의 정책수단은 '정부지출 효율화'와 '소득지원 성격의 복지지출 개혁', 2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의료분야의 경우 시장기제 활용, 보상체계 개선, 관리체계 개혁 등을 통해서, 교육분야의 경우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서비스 공급, 분권화된 예산운용, 교육시장의 경쟁기제 작동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화가 가능

- 복지지출의 경우 효과적인 정책조준을 통해, 공적연금의 경우 구조개혁과 함께 정년연장을 통해 지출 효율화가 달성 가능

- 인구구조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복지지출 개혁의 성공은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중요한 선결요건

- 재정건전화를 위한 수입 측면의 정책수단으로는 조세지출 축소를 통한 세입기반 확대, 환경 관련 세제 확대 및 세무 행정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 퇴직연금, 자가소유, 의료보험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지출을 축소하는 것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
 - 환경세, 부동산세, 금융거래세 등은 조세왜곡을 줄임과 동시에 재정수입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 가능
 - 조세지출 축소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고려할 때, 조세 지출 규모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 재정기관 및 재정준칙은 재정건전화 계획의 신뢰성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으며, 특히 금융시장이 불안한 국가에서는 더욱 필요
 - 장기적으로 재정기관의 도입은 재정정책 기조가 재정건전화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독립적인 재정정책 관련 기관의 설립은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 다만, 재정기관 및 재정준칙 운용은 최근에 시작되었으며 정책적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음.
 - 재정건전화 정책의 신뢰성은 재정기관 및 재정준칙의 운용뿐만 아니라 정기권의 의지와도 깊이 연계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

나. 주요 논의 내용

- 재정수지격차(fiscal gap)에 대한 장기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한국의 경우 과소추정된 것으로 판단됨.
 - GDP 대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지출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었기 때문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지출의 증가추세를 현실화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지출규모는 GDP 대비 2010년 3.3%에서 2050년에는 7.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상당수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2050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를 50%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재정수지 흑자폭은 분석결과보다 클 것으로 예상
- 한국의 경우 2010~11년 재정수지 개선속도가 계획보다 빠르게 실현됨에 따라 2012~13년중에 재정수지 균형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은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2~3%p 정도 낮게 유지하는 재정규율을 운용 중에 있음
 - 구체적으로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높은 경제부문의 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대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투자와 재분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음
- 현재 유럽 재정위기 회복 지연 및 국내외 경제 둔화 등으로 인해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정부는

4/4분기 재정집행속도를 높임으로써 경기급락에 대비할 계획

- 금융위기 이후 재정상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됨에 따라 경기둔화가 가시화될 경우에 대한 재정대응의 여력이 있는 상태
- 다만 적극적 재정대응 여부는 향후 하방위험 지속 및 확산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회원국들은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으나 재정건전화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견해를 보임.

- 대부분의 EU지역 대표들은 재정건전화를 통한 시장의 신뢰회복이 경기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며, 따라서 재정건전화를 정책적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함을 주장
- 미국 대표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경제성장이 재정건전화보다 더 중요한 이슈임을 주장
 - 미국 대표는 주요 선진국의 채국수익률이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이들 국가의 재정여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심각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해석
 -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주요 선진국들은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일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 다만 유럽의 일부 재정위기 국가에서는 재정건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함에는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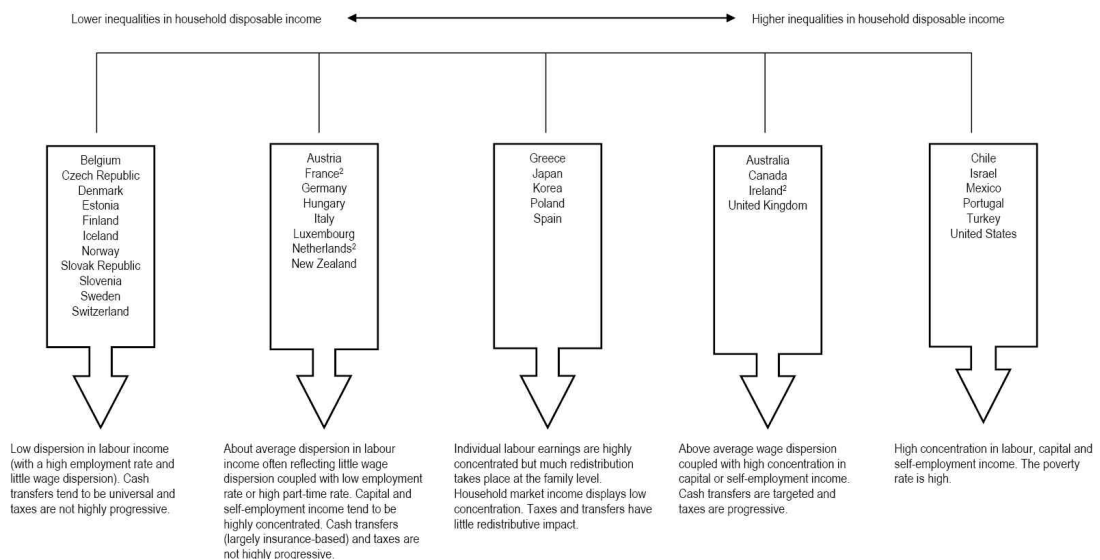
- 반면, 독일 대표는 독일, 영국의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어 재정책대가 쉽지 않으며, 재정건전화에 가장 중요한 과제를 주장
- 다수의 대표들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기초재정수지 개선 규모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비현실적임을 지적
 - 대규모의 재정긴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심각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초재정수지의 개선 규모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지적
 -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수준의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를 추구할 필요는 없으며, 개별국가의 상황에 따라 적정 수준의 정부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
 - 벨기에, 스웨덴, 프랑스 등 다수의 대표들은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지출구조의 변화를 시뮬레이션에 포함해한다는 아국이 지적에 대해 동의
- 다수의 대표들은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준칙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개혁도 동시에 실시되어야 함에 동의
 - 스웨덴 대표는 재정준칙 운용이 재정건전화에 기여하였음을 주장
 - 네덜란드, 벨기에 등 다수의 대표들은 재정준칙의 운용 및 제도 개혁은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지적 - 정치적 결단에 따른 재정준칙의 운용은 재정건전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

7-2. 소득재분배와 성장제고 정책

가. OECD 안전 요약

- 비슷한 소득 불균형 패턴을 보이는 나라끼리 5개 그룹으로 분류한 결과 우리나라는 중간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 불균형 정도가 OECD 평균보다 상회하는 나라일수록 자본 및 노동의 집중도가 높고, 자영업자 소득이 높으며, 빈곤율 또한 높게 나타남(칠레, 이스라엘, 멕시코, 포르투갈, 터키, 미국)
 - 소득 불균형의 정도가 OECD 평균 수준인 나라는 실업률은 높지만 노동임금의 격차는 크지 않으며 단순한 현금이전 구조를 보임(벨기에 및 북유럽 국가 등).

[그림 1] 소득분균형 정도에 따른 국가별 구분



- 노동수입 불균형(근로자간 소득 불균형)과 노동소득 불균형(전체 경제활동인구간 소득 불균형, 실업자 포함)은 임금수준, 노동시간,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율 등에 따라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임
 - 국가별 소득 불균형은 주로 정부 정책과 제도적 환경에 기인
 - 또한, 과학 변화나 세계화도 소득 불균형에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교육수준)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수준과 소득 불균형간의 이론적 관계는 불분명하지만, 교육기회의 평등성을 촉진하는 정책들은 소득 불균형을 개선할 가능성
 -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낮아질수록 소득 분포가 넓어져 소득불균형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다만, 낮은 최저임금이 소득 분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고용 증가에 따라 부분적으로 상쇄될 수 있음
 -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대한 결속력이 높을수록 소득 편차가 작아져 노동 소득 불균형을 축소
 - 집합적 임금 합의에 관한 법적 범위의 확대 또한 비슷한 효과를 가짐
 - (노동시장 정책)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증가는 고용을 증진시킴으로써 소득 불균형을 축소
 - (노동시장) 노동시장의 이원구조를 완화하는 정책은 임금격차와 실업률을 감소시켜 소득 불균형을 축소
 - (구조정책) 구조정책은 소득 불균형 정도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소득 불균형의 경우 노동 시간, 직업의 유형 및 분야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성별은 소득차이의 상당한 부분을 설명
- 이러한 차이를 줄이는 정책(예: 아동·보육관련 개선 정책)은 남녀간 보다 동등한 노동 시장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
- 하지만 여전히 성별 소득 차이의 상당 부분은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음
- (이민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주민보다 이민자들의 고용과 임금이 더 낮은 경향을 보임
 -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강화하는 정책이 소득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조세보다 현금소득이전이 소득 불균형 개선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평균적으로 소득 불균형 축소의 75%는 현금소득이전, 나머지는 조세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세정책의 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난 가운데 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조세의 누진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노동관련 조세의 누진성을 확대하는 가운데 소득 구간별 개인소득세율의 차이는 점차 감소
 - 더불어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세 면제를 확대
 - 개인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의 혜택은 주로 부유층에 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근로세액공제는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적자본 축적, 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 대부분 정책은 소득 불균형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경제성장을 촉진
 - 인적 자본의 축적, 평등한 교육기회 부여,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 여성 노동 시장 참가 촉진, 교육에 있어서의 성차별 축소 등을 위한 정책은 소득 불균형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음
- 하지만 집합적 임금 합의에 관한 법적 확장 등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부 정책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노동 조합 활동은 임금 분배를 압박하여 소득 불균형을 축소
 - 하지만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기업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으며, 실업률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 성장을 저해
 - 또한, 상위 소득, 재산, 유산 등에 대한 높은 세율은 조세시스템의 누진성을 증가시켜 근로 및 투자유인을 낮춤
- 1인당 GDP를 증대시키기 위한 일부 정책들은 소득불균형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남
 - 관대한 실업 혜택 폐지, 제품 시장의 자유화, 최저임금 하락 등
 - 조세왜곡을 낮추는 정책은 성장 인센티브를 높여줄 수 있으나 소득 불균형 해소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나. 주요 논의 내용

-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면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등 누진성을 강화하면서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과,
 - 지출증가율을 세입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등 재정준칙을 강화하는 가운데, 지출의 구성비 중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지출측면의 방안이 있음

- (세입 측면) 한국은 최근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인하계획을 철회*하여 누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 제고

* '11.9월말 정부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11월초 국회(재정위) 상정 예정

- ① 당초 '12년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계획(과표 8,800만원 초과 35→33%)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철회
- ②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계획(과표 2억원 초과 22→20%)도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과표 50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철회하고,
 -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과표 2억원~500억원의 중간 구간을 신설하여, 동 구간에서는 당초 예정대로 세율을 20%로 인하

- (지출 측면) 내년도 지출증가율(5.5%)을 세입증가율(9.5%)보다 4%p 낮게 운영하는 등 재정준칙을 강화하면서,
 - 총지출 구성 중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

* GDP대비 복지지출비중(%): ('01년)5.2 ('05년)6.4 ('08년)8.3 ('10년)9.6

- 특히,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 각종 정책과 제도를 고용유인형(임투세액공제→고용투자세액공제)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병행 중